

2023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 경 사 (1교시) -



성 명 :

응 시 번 호 :

응시자 유의사항

- ※ 경사(1교시) 시험 과목 : 형법(07), 해사법규(09)
-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해 양 경 찰 청

형 법

1. 다음 중 법인의 범죄능력과 양벌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 책임은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된다.
- ② 양벌규정에 의해서 법인 또는 영업주를 처벌하는 경우 그 처벌은 직접 법률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한 처벌에 종속하므로 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처벌의 전제조건이 된다.
- ③ 회사 대표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의 형량을 작량감경하고 병과하는 벌금형에 대하여 선고 유예를 하였다면 양벌규정에 따라 그 회사를 처단함에 있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지입차주가 세무관서에 독립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지입된 차량을 직접 운행 관리하면서 그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지입차주는 객관적으로나 외형상으로나 그 차량의 소유자인 지입회사와의 위탁계약에 의하여 그 위임을 받아 운행·관리를 대행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구 「도로법」 제100조 제1항에서 정한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 해당한다.

2.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장에서 동료 사이에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샷대질을 피하려고 뒷걸음치던 피해자가 장애물인 철받침대에 걸려 넘어져 두개골절로 사망하였다면, 폭행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친구를 살해할 의도로 친구가 살고 있는 집을 방화하여 그를 사망하게 하였다면,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와 살인죄가 성립하고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 ③ 상해 후 피해자가 졸도하자 죽은 것으로 오인하고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서 베란다 아래로 떨어뜨림으로써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상해죄와 과실치사죄의 경합범이 성립한다.
- ④ 배우자가 경영하는 미장원에 고용된 부녀에게 성교 요구를 불응하면 해고한다고 위협하여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처녀막이 파열되었다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치상죄가 성립한다.

3. 다음 중 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직장상사의 지시로 인하여 그 부하가 범법행위에 가담한 경우, 직무상 지휘·복종관계에 있다 하여 범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 ②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가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으려는 진지한 노력을 했음에도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위법성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및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 ③ 광역시의회 의원 甲이 선거구민들에게 의정보고서를 배부하기에 앞서 미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들의 지적에 따라 수정한 의정보고서를 배부한 경우, 甲의 행위는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
- ④ 변호사 자격을 가진 국회의원이 낙천대상자로 선정된 사유에 대한 해명을 넘어 다른 동료 의원들이나 네티즌의 낙천대상자 선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반론을 담은 의정보고서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보좌관을 통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구두로 문의하여 답변 받은 결과 선거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4. 다음 중 주관적 정당화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순수한 결과반가치론에 의하면 위법성 조각사유에서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없어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 ② 일원적 인적 불법론에 의하면 구성요건적 행위는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있는 경우에만 행위반가치가 탈락하여 정당화될 수 있다.
- ③ 우연방위 효과에 관한 불능미수범설은 기수범의 결과반가치는 배제되지만 행위반가치는 그대로 존재하므로 불능미수의 규정을 유추적용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 ④ 「형법」의 규정에 의하면 우연방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5. 다음 사례에서 불능미수의 학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사 례 > —
甲은 평소 맘에 들지 않던 乙이 동네 벤치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살해하기 위해 총을 발사하였다. 그러나 乙은 甲이 총을 발사하기 전에 이미 심장마비로 사망한 상태였다.

- ① 객관설(절대적 불능 상대적 불능 구별설)에 의하면 결과발생이 어떠한 경우에도 개념적으로 불가능하여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② 구체적 위험설에 의하면 일반인이 乙을 살아 있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乙을 사망한 것으로 인식한 경우에도 행위자 甲의 인식이 우선시되므로 위험성이 인정된다.
- ③ 추상적 위험설에 의하면 甲은 乙을 살아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위험성이 인정된다.
- ④ 주관설에 의하면 위 사례의 경우 위험성이 인정된다.

6. 다음 <보기> 중 판례가 긍정하는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보 기 > —
㉠ 편면적 방조에 있어서 공범종속성
㉡ 예비단계에 있어서 방조범 성립
㉢ 합동절도의 공동정범 성립
㉣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성립
㉤ 강간치상죄의 동시범특례규정 적용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7. 甲이 丙으로부터 배당금의 수령을 위임받은 후, 乙을 기망하여 丙을 상대로 한 배당이의 소송의 제1심 패소판결에 대한 항소를 乙로 하여금 취하하게 한 경우 甲의 죄책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기죄
 - ② 강제집행면탈죄
 - ③ 권리행사방해죄
 - ④ 무죄

8. 다음 <보기> 중 「형법」상 미수범의 처벌규정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보 기 > —
㉠ 유기 등 치사상죄
㉡ 불법체포죄
㉢ 재물손괴죄
㉣ 공문서부정행사죄
㉤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상비밀누설죄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9. 다음 중 감금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정신병자도 감금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 ② 감금행위가 단순히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이 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에는 감금죄와 강도상해죄가 성립하고, 두 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 ③ 감금행위가 강간죄나 강도죄의 수단이 된 경우 감금죄는 강간죄나 강도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④ 감금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사된 단순한 협박 행위는 감금죄에 흡수되어 따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10. 다음 <보기> 중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 방해죄에서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보 기 > —
㉠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
㉡ 초등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여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것
㉢ 종종 정기총회를 주재하는 종종 회장의 의사 진행업무
㉣ 주식회사의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행위

- ① ㉠
- ② ㉡
- ③ ㉢
- ④ ㉢, ㉣

1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다른 사람의 주택에 무단 침입한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퇴거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한 경우 위 판결확정 이후의 행위는 별도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 ②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는 바로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것으로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가 인정된다.
- ③ 입찰방해죄는 입찰참가자들 중 일부와의 사이에만 담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지만, 입찰 자체가 실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④ 대문을 몰래 열고 들어와 담장과 피해자가 거주 하던 방 사이의 좁은 통로에서 창문을 통하여 방안을 엿본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2. 다음 중 절도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실상 퇴사하면서 회사의 승낙 없이 가지고 간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들은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한다.
- ② 타인의 전화기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전화통화를 하는 행위에 의하여 이용되는 역무는 절도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
- ③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그 자체는 재물이 될 수 없고, 또 이를 복사하거나 출력한 행위를 가지고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도 없다.
- ④ 위조된 유가증권은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13. 다음 중 배임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낙찰계의 계주가 계원들에게서 계 불입금을 징수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담하는 계금지급의무는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
- ② 미성년자와 친생자관계가 없으나 호적상 친모로 등재되어 있는 자가 미성년자의 상속재산 처분에 관여한 경우,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
- ③ 회사의 승낙없이 임의로 지정 할인율보다 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회사가 지정한 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이른바 ‘덤핑판매’에서, 제3자인 거래처에 시장 거래 가격에 따라 제품을 판매한 경우라도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기업의 영업비밀을 사외로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 회사직원이 이익을 얻기 위하여 경쟁업체에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14. 다음 중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람을 살해할 의사를 가지고 범행을 공모한 후 대마초를 흡연하고 범행하였다면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을 할 수 없다.
- ②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 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심신 장애로 인한 감경을 할 수 없다.
- ③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심신장애에 관한 「형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이 배제된다.
- ④ 피고인이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음주할 때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위험성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15. 다음 <보기> 중 유가증권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를 가장 옳게 나열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 ㉠ 유가증권이란 증권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된다는 것, 그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한다는 것과 반드시 유통성을 가질 것을 필요로 한다.
- ㉡ 甲이 백지 약속어음의 액면란을 부당 보충하여 위조한 후 乙이 甲과 공모하여 금액란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乙의 행위는 유가증권 위조나 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 ㉢ A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바 있는 甲이 A회사의 대표이사가 이미 乙로 변경된 이후 임에도 불구하고, 이전부터 사용하여오던 자기 명의로 된 A회사 대표이사 명판을 이용하여 여전히 자신을 A회사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행사한 경우 유가증권 위조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 ㉣ 위조유가증권의 교부자와 피교부자가 서로 유가증권위조를 공모한 경우 그들 사이의 위조유가증권 교부행위는 유가증권의 유통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어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한다.

- | | | | | | | | | |
|---|--------|---|-------------|---|-------------|---|-------------|---|
| ① | \neg | 0 | \sqsubset | X | \sqsupset | 0 | \sqsupset | X |
| ② | \neg | X | \sqsubset | 0 | \sqsupset | X | \sqsupset | 0 |
| ③ | \neg | X | \sqsubset | 0 | \sqsupset | X | \sqsupset | X |
| ④ | \neg | X | \sqsubset | X | \sqsupset | X | \sqsupset | 0 |

16. 다음 중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강간하려고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나 피해자가 다음에 친해지면 응해주겠다고 설득하여 그만둔 경우
- ②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고 했으나 불길의 치솟자 발각이 두려워서 불을 끈 경우
- ③ 요구르트에 농약을 섞어 마시게 했지만 그 농약이 치사량에 달하지 않아서 살해하지 못한 경우
- ④ 살인범이 자수한 경우

17. 다음 <보기> 중 위증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 ㉠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증인능력이 없으므로 당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 민사소송절차에서 증인이 선서 후 증인진술서에 기재된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진술함이 없이 단지 그 증인진술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대로라는 취지의 진술만을 한 경우, 그것이 증인진술서에 기재된 내용 중 특정 사항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과 같이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재된 내용에 일부 허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 증인이 증인신문절차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고 그대로 증인신문절차가 종료된 후, 별도의 증인 신청 및 채택 절차를 거쳐 그 증인이 다시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종전 증인신문절차에서의 진술을 철회·시정하더라도 종전 증인신문절차에서 행한 위증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 ㉣ 증인이 소송사건의 같은 심급에서 변론기일을 달리하여 수차 증인으로 나가 수 개의 허위 진술을 하였더라도 최초에 한 선서의 효력을 유지시킨 후 증언하였다면 1개의 위증죄가 성립한다.

- ① ㄴ, ㅈ
② ㄱ, ㄴ, ㅈ
③ ㄱ, ㅈ, ㅊ
④ ㄱ, ㄴ, ㅈ, ㅊ

18. 다음 중 「형법」상 구성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외교상기밀누설죄(제113조 제1항), 공무상비밀누설죄(제127조) 및 업무상비밀누설죄(제317조 제1항)는 신분범이다.
- ② 수뢰죄(제129조 제1항), 증뢰죄(제133조 제1항) 및 알선수뢰죄(제132조)는 뇌물을 약속한 때에도 성립한다.
- ③ 직권남용죄(제123조), 불법체포·감금죄(제124조) 및 폭행·가혹행위죄(제125조)의 행위 주체는 같다.
- ④ 사전수뢰죄(제129조 제2항)와 사후수뢰죄(제131조 제3항)는 범죄의 성립에 ‘부정한 청탁’을 요구한다.

19. 다음 <보기>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 ㉠ 위증죄와 모해위증죄가 「형법」 제33조 단서 소정의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 ㉡ 위증죄와 무고죄에서의 ‘허위’의 개념은 동일하다.
- ㉢ 진술내용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실에 관한 것인지 여부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의 여부는 위증죄의 성립과 관계가 없다.
- ㉣ 피고인이 선서무능력자로서 범죄현장을 목격하지도 못한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현장을 목격한 것처럼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한 경우에는 증거위조죄가 성립한다.

- ① ㉠, ㉡ ② ㉠, ㉢, ㉣
- ③ ㉡, ㉣ ④ ㉡, ㉢, ㉣

20. 다음 중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기록위작·변작)에서 정한 ‘위작’에 권한 있는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행위까지도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 ② 법정소동죄 등을 규정한 「형법」 제138조에서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포함시켜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 ③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벌법규의 구성요건과 가벌성에 관한 규정에 준용되나,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또는 처벌조각사유인 형면제사유에 관하여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적용하여 가벌성의 범위가 확대되더라도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 ④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변작)의 행위주체에 공무원, 공무소와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와 관련되는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

21. 다음 중 범죄의 성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일반교통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 ② 공무집행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발생을 요하지 아니한다.
- ③ 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체포행위에 확실히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을 요한다.
- ④ 범인도피죄는 범인을 도피하게 함으로써 기수에 이름과 동시에 범죄행위도 종료되는 즉시범이다.

22. 다음 중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의 선행행위 후 피해자의 과실이 개입되어 결과가 발생한 경우,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이라면 甲의 선행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② 甲이 야간에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A를 충격하여 A가 도로에 넘어졌고, 그로부터 약 40초 내지 60초 후에 乙이 운전하던 타이탄 트럭이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A를 역과하여 사망케 한 경우, 甲의 행위와 A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정된다.
- ③ 정신과질환으로 입원한 환자의 주치의사가 환자의 전해질이상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포도당액을 주사하여 환자가 이로 인한 쇼크로 사망하였다면, 그 치료과정에서 야간당직의사의 과실이 일부 개입했다더라도 주치의사 및 환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환자의 주치의사는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④ 의사 甲이 병원에 후송되어 온 A를 연탄가스 중독으로 진단 및 치료하고 퇴원시키면서 A가 자신의 병명을 물었음에도 연탄가스에 중독된 것이라는 사실과 필요한 요양방법을 지도하여 주지 않아서, A가 퇴원 즉시 처음 사고가 난 방에서 다시 자다가 재차 연탄가스에 중독된 경우, 의사 甲의 과실과 A의 재차 연탄가스중독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3. 다음 중 고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 ② 「형법」 제167조 제1항의 일반물건방화죄에서 ‘공공의 위험 발생’은 고의의 인식 대상이다.
- ③ 「형법」 제136조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과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인식, 그리고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내용으로 한다.
- ④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위하여는 친족관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여야 하나, 행위자가 이를 인식할 필요는 없다.

24. 다음 중 공범과 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법」 제33조의 신분관계라 함은 남녀의 성별, 내·외국인의 구별, 친족관계, 공무원인 자격과 같은 관계뿐만 아니라 널리 일정한 범죄행위에 관련된 범인의 인적관계인 특수한 지위 또는 상태를 말한다.
- ② 비신분자가 신분자와 공모하여 업무상횡령죄를 범한 경우 비신분자에게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고 처벌에 있어서도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해야 한다.
- ③ 의료인일지라도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의료법」 위반(무면허의료) 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 ④ 공무원이 아닌 자는 공정증서원본등불실기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으나,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과 공동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를 범한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자도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25. 다음 중 피고인 甲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A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 甲이 자신의 채권자 乙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A회사 명의 정기예금에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그 후 乙이 피고인 甲의 동의하에 위 정기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A회사 자금을 전액 인출한 경우
- ② 피고인 甲이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입한 후 흡연할 기회를 포착하기 위하여 2일 이상 하의 주머니에 넣고 다님으로써 매입한 대마를 소지한 경우
- ③ 피고인 甲이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비밀이 담긴 CD를 절취하여 그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한 경우
- ④ 피고인 甲이 자동차를 절취한 후, 훔친 자동차의 번호판을 떼어 내 다른 자동차에 임의로 부착하여 운행한 경우

26. 다음 중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에는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이행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이 포함된다.
- ② 무효인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을 경락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는 낙찰자의 점유는 적법한 점유로서 그 점유자는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이다.
- ③ 렌트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회사 보유 차량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담보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넘겨주었는데, 다른 공동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위 차량을 몰래 회수하도록 한 경우, 피해자의 점유는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점유에 해당한다.
- ④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이 자동차등록원부에 타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차량의 보조키를 이용하여 이를 운전하여 간 경우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한다.

27. 다음 <보기> 중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를 가장 옳게 나열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 ㉠ 甲은 乙과 공모하여 가출 청소년 丙(여, 16세)에게 낙태수술비를 벌도록 해주겠다고 유인하였고, 乙로 하여금 丙의 성매매 홍보용 나체 사진을 찍도록 하였으며, 丙이 중도에 약속을 어길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각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甲이 별건으로 체포되어 구치소에 수감 중인 동안 丙이 乙의 관리아래 성매매를 계속한 경우, 丙의 성매매 기간 동안 甲이 수감 되어있었다 하더라도 甲은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 ㉡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 ㉢ 업무상 배임죄로 이익을 얻는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를 배임의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 소극적으로 배임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족하며,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체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 ㉣ 전국노점상연합회가 주관한 도로행진시위에 단순 가담자인 甲이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시위 중 경찰관 등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행위로 체포된 경우 체포된 이후에 이루어진 다른 시위참가자들의 범행에 대해서는 공모 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할 수 없다.

- ① ㉠ X ㉡ O ㉢ X ㉣ O
- ② ㉠ O ㉡ X ㉢ O ㉣ X
- ③ ㉠ O ㉡ O ㉢ X ㉣ O
- ④ ㉠ O ㉡ X ㉢ X ㉣ O

28. 다음 중 포괄일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동일한 저작권자의 여러 개의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가 단일하고 동일한 범의 아래 행하여 졌다면 「저작권법」 위반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 ②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도중 개설자 명의를 다른 의료인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종전과 동일하므로 「의료법」 위반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 ③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는 그 법에 규정된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 또는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 ④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도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한 경우에는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29. 다음 중 집행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라고 할지라도 집행유예가 실효·취소됨이 없이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하다.
- ②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 ③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법원이 명하는 사회봉사 명령으로서 일정한 금전출연은 명할 수 있으나 준법 경영을 주제로 하는 강연 또는 기고를 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④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지만,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30. 다음 중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파업은 그 자체로 부작위가 아니라 작위적 행위이다.

②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에게 법률상의 소화의무가 인정되는 외에 소화의 가능성 및 용이성이 있었음에도 그 소화의무에 위배하여 이미 발생한 화력을 방치함으로써 소훼의 결과를 발생시켜야 한다.

③ 부진정부작위범을 작위범과 동일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보증인적 지위 외에 부작위와 작위의 동가치성(상응성)을 요하며, 이는 「형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④ 고지의무 위반은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같이 ‘보험사고의 우연성’이라는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31. 다음 중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강제추행죄는 자수범이 아니므로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

② 甲이 A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A를 간음하였으나 A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준강간죄의 장애미수가 성립한다.

③ 「형법」 제302조의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의 ‘위계’는 간음행위 그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를 의미하고, 간음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내지 간음행위와 결부된 금전적 대가와 같은 요소는 위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④ 강제추행죄의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것으로 족하고, 반드시 그 행위의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할 필요까지는 없다.

32. 다음 중 협박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모가 있는 자리에서 서류를 보이면서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서류를 세무서로 보내 세무조사를 받게 하여 피해자를 망하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장모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전하게 하고, 그 다음날 피해자의 처에게 전화를 하여 “며칠 있으면 국세청에서 조사가 나올 것이니 그렇게 아시오”라고 말한 경우

② 甲은 乙女에게 “자동차에 타라. 타지 않으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협박하면서 乙女를 자동차 뒷좌석에 강제로 밀어 넣고 20여 분간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③ 甲은 乙의 처와 통화하기 위하여 야간에 전화를 하였는데 남편 乙이 받자 20분 내지 30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전화를 끊어버리거나 어떤 때에는 “한번 만나자, 나한테 자신 있나.”라고 말한 경우

④ 같은 집에 세들어 사는 20세의 미혼의 처녀가 자신의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이 그 처녀의 아버지와 언니에게 “빨리 일을 해결해야 할 것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처녀를 간통죄로 고소하겠다. 당신 딸이 가정 파괴범이다. 시집을 보내려고 하느냐 안보내려고 하느냐.”고 말한 경우

33. 다음 <보기> 중 「형법」 제228조의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의 객체인 ‘공정증서 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여권’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보 기 >
- ㉠ 상업등기부
- ㉡ 공증인이 인정한 사서증서
- ㉢ 사업자 등록증
- ㉣ 공증사무 취급이 인가된 합동법률사무소 명의로 작성된 공증에 관한 문서

-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34. 다음 중 강도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들이 승용차에 승차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마침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고인 중 1인이 창문으로 손을 내밀어 피해자 소유의 손가방 1개를 낚아 채어감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골절상을 입게 한 경우 강도치상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② 甲과 乙, 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甲은 망을 보고 乙과 丙이 재물을 절취한 다음 달아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면 甲도 이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어 강도치상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 ③ 피고인이 강도의 고의로 乙男으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고 이어서 丙女를 강간하였다면 강도강간죄를 구성한다.
- ④ 채무의 존재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상속인이 존재하고 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하더라도 강도살인죄가 성립할 수 없다.

35. 다음 중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 ② 글의 집필의도, 논리적 흐름, 서술체계 및 전개 방식, 해당 글과 비평의 대상이 된 말 또는 글의 전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평균적인 독자의 관점에서 문제된 부분이 실제로는 비평자의 주관적 의견에 해당하고, 다만 비평자가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이해된다 하더라도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 ③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 ④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화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36. 다음 중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다. 따라서 비록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는 없다.
- ② 관공비 등을 사용한 임직원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사후적으로 그 사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함부로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를 횡령하였다고 추단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어야 하고, 부동산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는 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아니라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
- ④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37. 다음 중 방화와 실화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성냥불로 담배를 붙인 다음 그 성냥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휴지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휴지통에 던졌다면 중실화죄에 있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
- ② 방화와 실화의 죄 중에는 구체적 위험범을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 위험의 내용으로는 ‘공공의 위험’만을 규정하고 있다.
- ③ 자기소유물에 대한 방화죄는 모두 구체적 위험범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으며, 구체적 위험의 발생은 구성요건요소로서 고의의 인식대상이 된다.
- ④ 연소죄는 자기소유물에 대한 방화가 확대되어 타인소유물 또는 현주건조물 등의 소훼라는 중한 결과를 야기한 경우를 처벌하기 위한 결과적 가중범이다.

38. 다음 중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병가 중인 공무원의 경우 구체적인 작위의무 내지 국가기능의 저해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직무유기죄의 주체로 될 수 없고, 따라서 직무유기죄의 주체가 되는 다른 공무원들과의 공범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직무유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 ② 하나의 행위가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와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행사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공소제기권자는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행사죄로만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 ③ 구청 공무원이 타인의 부탁을 받고 차적 조회 시스템을 이용하여 범죄 현장 부근에서 경찰의 잠복근무에 이용되고 있던 경찰청 소속 차량의 소유관계에 관한 정보를 알아내 타인에게 알려준 경우, 위 차량의 소유관계에 관한 정보는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있어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교육기관 등의 장이 징계의결을 집행하지 못할 법률상·사실상의 장애가 없는데도 징계의결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법정 시한이 지나도록 그 집행을 유보하는 모든 경우에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39. 다음 중 장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단순히 보수를 받고 본범을 위하여 장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그와 같이 사용할 목적으로 장물을 건네받은 경우도 장물을 취득한 것에 해당된다.
 - ②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우리 「형법」에 비추어 본범의 행위가 절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라면 이에 의하여 영득된 재물은 장물에 해당한다.
 - ③ 장물죄는 재산범인 본범이 영득한 재물에 사후적으로 관여하는 사후종범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절도죄보다 법정형을 가볍게 규정하고 있다.
 - ④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후 매매 목적물을 인도받을 때에 장물인 정을 알게 되었다면 장물취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40. 다음 중 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제3자란 행위자와 공동정범 및 교사자와 방조자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 ②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무원과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를 기초로 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범죄를 실행하였다면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과 비공무원에게 「형법」 제129조 제1항에서 정한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 ③ 단지 상대방으로 하여금 뇌물을 수수하는 자에게 잘 보이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뇌물을 수수하는 자 역시 상대방이 그러한 기대감을 가질 것이라고 짐작하면서 수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고 제3자가 그러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범죄행위를 알면서 방조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더라도 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되어 제3자 뇌물수수방조죄가 인정될 수 있다.

해사법규

1. 다음 중 「해양경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무기 및 장비 등의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선박이 3회 이상 정선 또는 이동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경비세력에게 집단적으로 위해를 끼치는 경우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
- ②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무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기사용의 기준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에 따른다.
- ③ 페인트볼 및 투색총은 경찰장구에 해당한다.
- ④ 경찰장비 및 경찰장구는 통상의 용법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2. 다음 중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규정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난구호비용 금액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 ② 선장 등의 납부의무자가 수난구호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장 등이 보관하는 물건을 공매하여 그 대금으로 비용을 충당한다.
- ③ 구호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잔여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장 등에게 환급한다.
- ④ 해수면에서의 수난구호는 구조본부의 장이 수행하고, 국제항행에 종사하는 내수면 운항선박에 대한 수난구호는 소방관서의 장이 수행한다.
3. 다음 중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중앙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중앙협의회 정기회의는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 ③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연안안전의 날은 매년 7월 18일로 한다.
- ④ 연안안전지킴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4. 다음 중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조종면허의 결격사유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만 14세 미만인 자는 조종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 ② 법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자가 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달아난 경우 이를 위반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조종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 ③ 법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자로서 그 위반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조종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 ④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조종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조종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5. 다음 중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제23조(벌칙)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징역형 및 벌금형을 과한다.
 - ②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출입통제 지역을 출입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 “연안해역”이란 「연안관리법」 제2조 제2호의 지역(「무인도서 등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무인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④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위탁기관의 위탁업무를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6. 다음 중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선박이 항구 또는 포구를 출항하기 직전 또는 그 직후나 해양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선박위치통보해역에 진입한 때” 하는 통보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위치통보 ② 변경통보
 - ③ 항해계획통보 ④ 최종통보

7. 다음 중 「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선박소유자는 연료유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3년간 연료유 견본을 보관해야 한다.
- ② 선장은 해상에서 유조선간 기름화물의 이송작업에 관하여 기름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하고, 최종 기록한 날부터 3년 간 보관해야 한다.
- ③ 선박소유자는 선박급유를 마치고 선박급유업자로부터 받은 연료유공급서의 사본을 3년 간 선박에 보관해야 한다.
- ④ 오염물질을 300킬로리터 이상 저장할 수 있는 해양시설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오염물질의 방제·방지에 사용되는 자재 및 약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8. 다음 중 「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오존층파괴 물질을 배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보전해역 및 특별관리해역을 지정·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 등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임시항행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임시해양오염방지 검사증서를 교부하고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에 그 검사결과를 표기하여야 한다.
- ④ 「해양환경관리법」 상 선박을 해체하고자 하는 자는 해체작업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작업 개시 7일전까지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9. 다음 중 「선박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해양수산부장관은 정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항해구역을 지정하여 선박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하는데,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항해구역의 종류로만 바르게 나열된 것은?

- ① 평수구역, 연해구역, 근해구역, 원양구역
- ② 평수구역, 연안구역, 연해구역, 원해구역
- ③ 평수구역, 연해구역, 근해구역, 원해구역
- ④ 내수구역, 연안구역, 근해구역, 원양구역

10. 다음 중 「유선 및 도선 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의 인명구조요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승객 정원이 13명 미만인 유선 : 30척까지는 1명으로 하되, 30척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척을 초과하는 20척 마다 1명을 추가한 인원 수
- ② 승객 정원이 13명 이상인 유선 : 승객 정원 50명까지는 1명, 51명 이상 100명까지는 2명으로 하되,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명을 초과하는 100명마다 1명을 추가한 인원 수
- ③ 승객정원이 51명 이상인 도선 : 승객 정원이 100명까지는 2명으로 하되,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명을 초과하는 100명마다 1명을 추가한 인원 수
- ④ 유·도선의 선원은 인명구조요원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선원의 임무를 전담해야 하기 때문에 인명구조요원의 임무를 겸할 수 없다.

11. 다음 중 「유선 및 도선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할관청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 종료일 1개월 전까지 해당 유·도선사업자에게 유·도선사업의 갱신에 관한 사항을 전화, 팩스, 휴대폰의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 ② 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휴업 또는 운항중단 신고를 한 자가 휴업 또는 운항중단 기간 중에 영업을 다시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사업 재개신고서를 영업재개일까지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면허를 갱신받거나 신고를 갱신하려는 자는 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 종료일 5일 전까지 사업 면허·신고 갱신신청·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휴업·폐업 신고서에 사업면허증 또는 사업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 휴업일 또는 폐업일 3일 전까지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다음 중 「해사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해상교통량의 폭주로 충돌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있어 통항분리방식이 적용되는 수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홍도 항로
- ② 거문도 항로
- ③ 보길도 항로
- ④ 영흥도 항로

13. 다음 <보기> 중 「선박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게 나열한 것은?

— < 보 기 > —

한국선박이 멸실·침몰 또는 해체된 때에는 선박 소유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이내에 선적항을 관할하는 (㉡)에게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① ㉠ : 30일 ㉡ : 지방해양수산청장
 ② ㉠ : 30일 ㉡ : 시장·군수·구청장
 ③ ㉠ : 60일 ㉡ : 지방해양수산청장
 ④ ㉠ : 60일 ㉡ : 시장·군수·구청장

14. 다음 중 「해사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음향신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추월선은 다른 선박의 추월에 동의할 경우에는 장음 1회, 단음 1회로 동의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② 서로 상대의 시계 안에 있는 항행중인 동력선이 기관을 후진하려는 경우 단음 3회의 기적신호를 행하여야 한다.
 ③ 도선선이 도선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신호에 덧붙여 단음 4회로 식별신호를 할 수 있다.
 ④ 좁은수로 등에서 다른 선박의 좌현 쪽으로 추월하려는 경우 추월하려는 선박은 장음 2회와 단음 2회의 순서로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15. 다음 중 「수산업법(시행령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어업의 제한·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 처분을 위반한 자로서 최근 5년 이내에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어획물·어선·어구를 몰수하여야 한다.
 ② 근해어업 및 연안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수산업법」 상 과징금은 어업지도선 및 경비함정의 건조·수리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어업권자가 「수산업법」 상 임대차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어업권을 임대한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16. 다음 <보기> 중 「어선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게 나열한 것은?

— < 보 기 > —

- ㉠ () :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 때 행하는 검사
 ㉡ () : 정기검사와 다음 정기검사와의 사이에 행하는 검사
 ㉢ () : 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 행하는 검사
 ㉣ ()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검사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행하는 검사

- ① ㉠ 특별검사 ㉡ 중간검사 ㉢ 건조검사 ㉣ 임시검사
 ② ㉠ 특별검사 ㉡ 중간검사 ㉢ 정기검사 ㉣ 임시검사
 ③ ㉠ 임시검사 ㉡ 중간검사 ㉢ 건조검사 ㉣ 특별검사
 ④ ㉠ 임시검사 ㉡ 중간검사 ㉢ 정기검사 ㉣ 특별검사

17. 다음 중 「어선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총톤수 20톤 이상인 어선에 대하여 선박국적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임시항행검사를 받고 항행하는 어선도 만재흘수선을 표시해야 한다.
 ③ 「어선법」 상 등록된 어선이 6개월 이상 행방불명이 된 경우 그 어선의 소유자는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어선법」 상 건조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어선을 건조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8. 다음 중 「항만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의 개발을 촉진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항만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항만정책심의회를 둔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항만시설 수급 전망, 항만 물동량 수요 예측 등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중앙심의회, 분과심의회 및 지방항만심의회는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5. 다음 중 「해양경찰법」 상 수사의 지휘·감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을 수사부서의 장으로 해양경찰청 외부에서 모집하여 임용할 수 있다.
- ② 수사부서의 장을 해양경찰청 외부로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하는 경우 수사부서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 ③ 변호사의 직에 7년 6개월, 대학에서 해양경찰학 분야 조교수의 직으로 5년 6개월 있었던 사람은 해양경찰청 수사부서의 장으로 임용될 수 없다.
- ④ 판사·검사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해양경찰청 수사부서의 장으로 임용될 수 없다.

26. 다음 <보기> 중 「해운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게 나열한 것은?

< 보 기 >

- ㉠ () : 해상여객운송사업이나 해상화물운송 사업을 경영하는 자(외국인 운송사업자를 포함)를 위하여 통상 그 사업에 속하는 거래를 대리하는 사업을 말한다.
- ㉡ () : 국내항(해상이나 해상에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에 있는 장소로서 상시 선박에 사람이 타고 내리거나 물건을 싣고 내릴 수 있는 장소를 포함)과 국내항 사이를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 ㉢ () :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를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 ① ㉠ 해운대리점업 ㉡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 ② ㉠ 해운대리점업 ㉡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
㉢ 외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
- ③ ㉠ 해운중개업 ㉡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 ④ ㉠ 해운중개업 ㉡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
㉢ 외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

27. 다음 중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규정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상레저 활동자가 착용하여야 할 인명안전장비의 종류를 정하여 특별한 지시를 할 수 있다.
- ② 수상레저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영업구역이 둘 이상의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 ③ 수상레저기구 등록 번호판은 재질에 따라 등록 번호판의 두께가 다르다.
- ④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의 안전검사에는 신규검사, 정기검사, 임시검사가 있다.

28. 다음 중 「낚시 관리 및 육성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낚시터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종전의 낚시터업으로 허가받거나 등록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승계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낚시터업자는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낚시터업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④ 영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낚시터업의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29. 다음 중 「선원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규정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제비로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선박소유자는 선원명부, 선원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임금대장 및 재해보상 등에 관한 서류를 작성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③ 승선평균임금이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승선기간에 그 선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승선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④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동안 해양 사고로 소지품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승선평균임금의 2개월분의 범위에서 그 잃어버린 소지품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30. 다음 중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규정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최초 수상구조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증을 발급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은 수상구조사가 될 수 없다.

③ 수상구조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서 48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31. 다음 중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규정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석조사관과 조사관은 해양사고의 조사, 심판의 청구, 재결의 집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담당한다.

② 해양사고와 관련 있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거나 그 사람에게 질문하는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양수산관서에 대하여 48시간 이내의 기간동안 해당자의 하선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해양사고란 해양 및 내수면에서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선박이나 육상시설·해상시설이 손상된 사고를 말한다.

④ 해양사고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안전심판원을 둔다.

32. 다음 중 「해양경찰법」 상 규정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에서 10년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로서 치안감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② 해양경찰위원회 위원은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해양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④ 당적을 이탈한 다음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33. 다음 <보기> 중 「낙시 관리 및 육성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게 나열한 것은?

< 보 기 >

-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 미만의 사람을 승선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 이상 또는 약물복용 상태에서 낙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조종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낙시어선이 갖추어야 할 구명설비 중 구명부환은 최대승선인원의 (㉢) 이상에 해당하는 수를 갖추어야 한다.
- 낙시어선업자는 낙시어선이 침몰한 날로 (㉣) 이내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	㉡	㉢	㉣
① 만 16세	0.05%	10%	10일	
② 만 16세	0.03%	30%	30일	
③ 만 14세	0.03%	30%	30일	
④ 만 14세	0.03%	10%	10일	

34. 다음 중 「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잔류성오염물질”이란 해양에 유입되어 생물체에 농축되는 경우 장기간 지속적으로 급성·만성의 독성 또는 발암성을 야기하는 화학물질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해양환경관리법」 상 과태료의 부과와 징수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③ 「해양환경관리법」 상 검사대상 선박의 소유자가 해양오염방지설비 등을 교체·개조 또는 수리하고자 하는 때 하는 검사는 임시검사이다.

④ 「해양환경관리법」 상 선박오염물질기록부의 보존기간은 최종기재를 한 날부터 1년이다.

35. 다음 중 「도선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처벌 규정의 기준이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① 도선사가 아니면서 도선을 한 사람

② 정당한 사유 없이 도선사에게 도선을 하지 못하게 한 선장

③ 도선사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면허증을 대여 받은 사람

④ 도선사 명의를 사용이나 그 면허증의 대여를 알선한 사람

36. 다음 중 「해양과학조사법」 상 규정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해양과학조사법」 상 관계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선·검색·나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기초자료”란 해양과학조사를 통하여 얻은 기초자료 및 시료를 말한다.
- ③ 해양과학조사의 정지 또는 중지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외국인등에게 알린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④ 대한민국의 영해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려는 외국인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7. 다음 중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관제 대상 선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
- ②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다만, 「어선법」에 따른 어선 중 국내항 사이만을 항행하는 내항어선은 제외한다.)
- ③ 「해사안전법」에 따른 위험화물운반선
- ④ 그 밖에 관할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이동하는 선박의 특성 등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선박

38. 다음 중 「선박직원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선박직원법과 가장 관계가 있는 국제조약은 STCW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협약이다.
- ② 만 18세 미만인 사람은 해기사가 될 수 없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해당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정황에 따라 위반한 날부터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기사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 ④ 소형선박 조종사는 6급 항해사 또는 6급 기관사의 하위등급의 해기사로 본다.

39. 다음 중 「해양경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해양경비기본계획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변정세의 변화에 따른 해양치안 수요 분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②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근해수역은 해양 관계 국내법령을 위반한 선박 등의 단속 등 민생치안 확보 및 임해 중요시설의 보호 경비를 규정하고 있는 수역이다.
- ④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비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경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40. 다음 중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항만운송사업의 종류는 항만하역사업, 검수사업, 감정사업, 검량사업으로 구분된다.
- ② 검수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검수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 ③ 「항만운송사업법」 상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 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항만에서 일시적으로 영업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④ 탱커선 또는 어획물운반선에 의한 운송은 항만운송에서 제외되는 운송에 해당된다.